

1조6000억 전남 해양펜션단지 투자심사 '대충' 업체 40% 중도 포기...사업 전반 재검토 시급

감사원, 전남도에 25개분야 시정·통보·주의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 관객을 맞이 위해 추진된 전남도의 1조6000억원 규모의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 15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40%인 6개 사업자는 투자비 확보도 하지 못해 아예 건립을 포기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시급하다.

감사원은 17일 "최근 전남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이 적절한 투자심사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국

고보조금이 재정지원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박람회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여수시와 영광군, 신안군 등 8개 시·군으로부터 해양테마펜션단지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받아 지난 2010년 7월까지 15건 1조603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영광의 한 해양펜션단지는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협약 체결 15개 사업 중 40%인 6개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5개 사업은 사업비가 각각 610억~8289억원에 달해 중앙투·용

자 심사 대상사업(500억원 이상)인데도 총사업비에서 민자유치 사업비를 제외한 뒤 재정지원 사업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시·군 자체투자심사만 거치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적발됐다.

실제 여수 A해양단지의 경우 사업비가 8289억원에 달하지만 중앙투·용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지원 사업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자체 투자심사로 끝냈다.

총사업비가 3000억원에 이르는 여수 B펜션단지도 타당성 조사 없이 지자체 투자심사만 거쳤으며, 1399억원 규모의 신안 C리조트, 580억원 규모의 해남 D펜션단지도 같은 방식의 사업이 이뤄졌다.

또 영광의 E펜션단지는 사업비

1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건립 자체를 포기하는 등 6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상수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11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

다른 사업체들도 대부분 단지기반 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토지 일부 매입 등 전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의 부정직한 직원 채용이 적발되는 등 25개 분야에 걸쳐 시정 4건, 통보 9건, 주의 12건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민간공사 원가 심사 과정에 무료 자문단을 운영한 전남도 행정지원국 세무회계과는 모범사례로 뽑혔다.

/오광록기자 kroh@



박준영 전남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DJ의 통일철학 재조명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차지사 대선 도전 가능성 확인

광주일보 여론조사, 7~8%대 지지율 선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와 적합도를 묻는 광주일보의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선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지사는 범야권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7.7%,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8.9%를 기록했다.

이는 안철수 원장, 문재인 의원, 손학규 고문 등 야권 대선주자 '빅3'에는 뒤처지지만 김두관 경남지사, 정동영 고문과는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가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한계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경우, 야권의 대선 구도에 최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지사가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한다면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다 경주에 따라 타 주자와의 연대 및 단일화 등에도 나설 수 있어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지사도 대선 출마를 전제로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뤄지면 8월 중순이나 늦어도 9월 초순에 시작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박 지사가 장고를 거듭할 경우,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동력이 상실되면서 현재의 지지율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해 여전히 '고민중'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15일 광주 금수강호텔에서 열린 '6·

15 12주년 초청 오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근 너무 좌측으로 기울고 있고, 이벤트 정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친노 후보로는 집권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변의 출마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하지만 최근 전체 일정의 절반을 여수세계박람회에 할애해야 할 만큼 지역 현안이 많아 고민중"이라며 "중립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6·15 12주년을 기념해 전남대에서 열린 'DJ의 통일철학 재조명과 한반도 통일' 기조강연에서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통일을 향한 남북 화해의 길을 가겠지만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간 평화와 화해·협력만이 민족 이익에 부합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꽃시장 "산성 수돗물 경보기준 상향"

강원도 광주시장은 15일 용연 정수장 산성 수돗물 공급 사태와 관련해 경보기준을 상향하고 다음달 7월 중순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피해주민의 배상처리는 민원인 처리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합리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상심의위원회를 운영,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정수장의 PH 알람(경보) 기준을 '최하 5.8, 최고 8.5'에서 '최하 6.3 최고 8.0'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의료계,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가 종합적인 영향 평가를 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돗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특히 안전장치, 기계, 시설 등을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광주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서 약품투입 밸브가 열리면서 강산성 응집제가 과다투입되는 바람에 '산성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대형어선 내년부터 연안 조업 금지

내년부터는 대형어선이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영세 어민들에 대한 생계 위협을 차단하고 연안 수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에서 11~22km(6~12마일) 이내의 연안에서 대형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천망 등 6개 어업에 조업금지 구역이 신설되고 동해구정형저인망, 쌍끌이대

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등 4개 어업에는 조업구역이 재조정된다.

1998년 한·일 어업협정, 2002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근해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대형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함으로써 영세 어업인들과 분쟁과 갈등이 계속됐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어업인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업금지구역 조정안과 세목망 조정안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장흥 토요시장 쇠고기 '100% 한우'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에서 유통되는 쇠고기가 '100% 한우'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산하 축산위생사업소가 최근 장흥 토요시장 한우 관매업소 18곳에서 한우 유전자 감별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외공원 용봉제 생태 습지공원으로

광주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 용봉제 주변 4만2000여㎡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심 속 생태 습지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생태습지 공원에는 황금수양버들 등 관목 5200여그루, 갈대 등 초화류 1만6000본 등이 심어졌다.

1면 '선거비 보전금액'서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은 2억5699만여원의 선거비용 지출액 중 기획사 대금 지불 명목으로 7500만원, 1억5725만여원을 쓴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은 유세차량(3000만원)·로고송 등(2040여만원)으로 모두 5040여만원을 CN커뮤니케이션 측에 지급했다.

또 선거비용 지출액이 1억5129만여원인 황차은 후보자(광산)는 명함 및 책자형 선거공보 등(1075만여

원)·방송 연설 대담차량(3300만원)·유세차량 녹화물 등(2674만여원) 등 7050여만원, 1억7765만여원을 쓴 장원섭 후보자(광산)는 법정선거기간 홍보물 등 8983만여원을 같은 업체에 발주했다.

한편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희국 광주 시교육감의 선거를 치르며 부풀린 금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회계분석팀이 파견된 만큼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공보의 부족 해소 '장학의사' 도입 검토

정부가 공중보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되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공보

의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단체와 만나 의견을 들었다"며 "의대 정원 외로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되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장학금으로 교육시킨 뒤 공공으로 배치시키면 읍·면 등의 의료취약지역의 부족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 시민단체와 다시 만나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는 공보의를 제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연합뉴스